

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
(2014년 6월 28일 시행)

※ 문제 총평 :

유병준

1.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자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-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.
- 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.

[해설] ①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비례대표의원원은 제외된다. ③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자가 필요하다. ④ 주민소환제는 직접참여방식이다. ⑤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과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주민소환에 대한 소청은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이며, 주민소송은 소청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[정답] ②

2. 공유재(common pool resource)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.
- ② 공유지의 비극(tragedy of commons)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.
- ③ 공유지의 비극(tragedy of commons)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.
- ④ 하딘(Hardin)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.
- ⑤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.

[해설]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서 자원의 고갈이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적절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개입이나 정부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한다. 지문 ④의 경우 적절한 정부개입(규제)을 주장하였지만 규제강화를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. 참고로 하딘은 공유재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㉠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사유화하거나, ㉡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. [정답] ④

3.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.
- ②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이다.
-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.
- ④ 사회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.
- ⑤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.

[해설] ② 물질 자본(경제적 자본)의 시장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(등가물)의 등가교환이지만, 사회적 자본은 교환관계는 등가물의 등가교환이 아니며 동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. [정답] ②

4. 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.
- ②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다.
- ③ 평가방식으로 볼 때 하향식 평가방식이다.
- ④ 정권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⑤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이다.

[해설]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국무총리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, 주요 현안시책, 혁신 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지문 ①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말하고자 한다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,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부정적 시각이 많다.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체제 확립에 의한 정책효과성을 제고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반영한 문제로 보인다. [정답] ①

5. 정책평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.
-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한다.
- ③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.
- ④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.
- 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/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.

[해설] ①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의 정도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에 해당한다. ②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은 내적 타당성이다. ③ 양적 평가가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. ④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평가의 '타당성'을 제고한다. 프로그램 논리모형이란 프로그램의 인과경로를 구축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준다. [정답] ⑤

6. 효과성 평가모형 중 퀸과 로보그(Quinne & Rohrbaugh)의 경합가치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?

- ① 조직이 내부·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와 조직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관한 네 가지 경쟁모형을 도출하였다.
- ②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.
- ③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며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평가유형이다.
- ④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다.
- 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하게 된다.

[해설] Quinn과 Rohrbaugh는 효과성에 대한 최선의 평가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효과성에 대한 변수에 따라 그 평가기준이 다르다고 보았다. ④는 합리적 목표모형으로 생산성(능률성)을 목표로 하게 된다. ③ 개방체제모형은 성장과 자원확보를 목표로 하는 모형이다. [정답] ④

[효과성 평가모형]

구 분	조직구조 중시(외부 초점)	인간 중시(내부 초점)
통제 지향	① 합리적 목표모형(공식화단계) 생산성(능률성)	③ 내부과정 모형(공식화 단계) 안정성, 통제와 감독
유연성강조	② 개방체제 모형(창업/정교화단계) 성장, 자원확보	④ 인간관계모형(집단공동체단계) 구성원 만족

7.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·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.
-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립의 기회를 제공한다.
-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.
-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,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.
- ⑤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, 비용-편익분석,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[해설]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(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)하려면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, 비용-편익분석,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③은 기존규제의 '완화'가 아니라 새로이 도입하거나 기존규제를 '강화'하고자 하는 경우이다. [정답] ③

8. 베버(M.Weber)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.
- ② 이상적인 관료제는 비정의성(impersonality)에 따라 움직인다.
- ③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.
- ④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.
- ⑤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.

[해설] ③ 베버의 이상적인 관료제는 기술적·행정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. [정답] ③

9. 맥그리거(McGregor)의 X-이론 측면에서 조직의 관리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
- ②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
- ③ 목표에 의한 관리체계의 구축
- ④ 상부책임제도의 강화
- ⑤ 고충적·계층적 조직구조의 확립

[해설] X-이론적 조직관리가 전통적 관리라면, 1960년대 이후 후기인간관계론에 바탕을 둔 MBO(목표관리)나 OD는 Y이론적 조직관리전략이다. [정답] ③

10. 조직문화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.
- ② 문화강도적 접근방법은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.
- ③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긍정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간주한다.
- ④ 상황론적 접근방법은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전제한다.
- ⑤ 문화유형론적 접근방법은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각각 달라진다고 여긴다.

[해설] Saffold의 조직문화접근법에 의하면 특성론적, 문화강도적, 상황론적, 문화유형론적 접근법이 있다. ④는 문화강도적 접근법의 특성에 해당한다. [정답] ④

11. 현대조직이론의 하나인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(outsourcing)하는 것이 효율적이다.
- ②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.

- ③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효과적이다.
- ④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⑤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.

[해설]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의 내부화가 필요하다. ③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효과적이다. 즉,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외부요소들을 조직 내로 통합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. ④ 거래비용에는 탐색비용, 정보이용 비용 등이 포함된다. ⑤ 거래비용이론은 원래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으므로, 공공조직보다 민간조직에 적용가능성이 높다. [정답] ②

12.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.
- ②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한다.
-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.
- ④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.
- ⑤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.

[해설]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는 직권면직의 사유이다(국공법 70조).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상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있다. 대개 사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. ④ 직위해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뿐 신분은 유지된다. ⑤ 강임과 강등을 구분해야한다. 강등은 징계이지만, 강임은 직제나 정원이 변경된 경우 하위직위로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가 아니다. [정답] ①

13.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.
- ②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워 한정된 계급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다.
- ③ 공무원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.
- ④ 해당 직무에 책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.
-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이 강조된다.

[해설] ③ 계급제는 일반행정이 중심이므로 전직과 전보(동일직급 내 보직이동)가 용이하다. 조직의 입장에서 순환보직 등 수평적 이동이 촉진되므로 부서 간 협조와 조정이 용이하다. [정답] ③

14.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?

- ① 과년도 지출
- ②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
- ③ 여비
- ④ 선박의 운영·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
- ⑤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

[해설] 지엽적인 문제이다. 과년도지출은 긴급배정 대상경비가 아니다. [정답] ①

[참고]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(예산의 배정) ⑤항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(긴급배정 대상경비) : 1.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. 선박의 운영·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.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.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.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. 여비 7.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.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

15.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설명은?

- ①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.
- ②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, 정부의 동의 없이

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.

- ③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.
- ④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.
- 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[해설] ⑤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,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. [정답] ⑤

16.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,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예산의 전용(轉用)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, 이용(移用)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.
- ④ 이체(移替)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,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.
- 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, 세출예산금액,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.

[해설]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(금전급부의무)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한 것이며 지출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실제로 지출을 하려면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[정답] ⑤

17.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.
- ②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.
- ④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.
- ⑤ 예산은 주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.

[해설] ④는 행정부 계획의 원칙으로 현대적 원칙에 해당한다. ①은 공개의 원칙이고, ②는 사전승인의 원칙이며, ③과 ⑤는 한정성의 원칙으로서 모두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. [정답] ④

18. 다음은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.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?

- ㉠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.
- ㉡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.
- ㉢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.
- ㉣ 광역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다.
- ㉤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있다.

- ① ㉠, ㉢, ㉤
- ② ㉠, ㉣
- ③ ㉠, ㉣, ㉤
- ④ ㉡, ㉣
- ⑤ ㉡, ㉢, ㉤

[해설] 맞는 것은 ㉡, ㉢, ㉤이다. ㉣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은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이 가진다.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㉤ 광역·기초의회의원 모두 정당공천이 가능하다. ㉠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

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[정답] ⑤

19.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
- ②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
- ③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역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능성
- ④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
- ⑤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

[해설] ⑤ 시민의 행정참여는 주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정책의 '집행'시 시민의 정책순응과 협조가 촉진되어 효율성을 제고시킨다. 정책과정의 지체·지연 행정의 전문성의 저해와 비능률을 초래 등은 단점이다.

[정답] ⑤

20. 최근 정부의 '정부 3.0'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개방·공유·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고 있다.
- ②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.
- ③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.
- ④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.
- 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.

[해설] '정부 3.0'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·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. ② 정부3.0은 국민과 정부의 면대면 접촉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.

[정답] ②